

北, 남한을 적으로 보고 통신선부터 끊었다...정부 '당혹'

북한, 청와대 핫라인 포함 모든 통신연락선 차단 조치

정부 '신중 모드' 유지...향후 남북협력 사업 차질 예상

북한이 9일 청와대 핫라인을 포함한 남북 모든 통신·연락선을 차단하고 대남 업무를 남측을 적으로 규정하는 '대적 사업'으로 바꾸겠다고 발표하면서 우리나라 압박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우리 정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비교적 차분하게 상황을 조금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반도 내 긴장감은 쉬이 가라앉지 않았다.

◇ 노동신문 '연락선 차단, 대적 사업'...청와대, 즉각 반응 자제

이날 오전 6시쯤 발표된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의 발표로 한반도는 긴장감에 휩싸였다.

노동신문은 "2020년 6월 9일 12시부터 북남 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유지해 오던 북남 당국 사이의 통신연락선, 북남 군부 사이의 동서해통신연락선, 북남통신시험연락선,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 청사와 청와대 사이의 직통통신연락선을 완전 차단·폐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남 사업을 대적 사업(적대시 전략)으로

전환하겠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이러한 발표는 AFP통신, 로이터, 중국 관영 중앙(CC)TV 등 주요 외신들도 주목할 정도로 파장을 일으켰다.

북한이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남한 당국의 대응을 문제 삼아 첫 조치로 언급했던 남북연락사무소 폐쇄를 이행하는 동시에 모든 소통 채널의 차단 수순을 밟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북한이 남북관계에서 위기감을 조성함으로써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통일부는 "남북 간 통신선은 소통을 위한 기본 수단이므로 남북 간 합의에 따라 유지돼야 한다"면서 "정부는 남북 합의를 준수하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도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북의 움직임에 대응하지 않고 차분하게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북측이 정한 시한인 정오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통상 연락사무소의 연락은 오전 9시 개시

통화와 오후 5시 마감 통화 두 차례 진행된다. 그러나 통일부는 이례적으로 이날 정오 12시에 추가적으로 시도했으나 북한은 응답하지 않았다.

청와대도 이날 오전 공식 입장을 자제하면서 남북 연락 채널 폐기에 이른 배경을 분석하고 대응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반응을 예상치 못했기에 당혹스러운 측면이 있지만 우선 북한 속내를 분석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 연락선 차단 이후 개성공단·군사합의 폐기 조치 이어지나 촉각

북한이 남북 소통 채널의 완전 폐기를 선언했고, 이날 오전까지 연락선이 불통이었던 만큼 이대로 남북 모든 소통의 창이 닫힐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더 나아가 그 이후의 조치도 언급된다.

앞서 북한은 통신연락선 폐기가 남북관계 단절의 '첫 단계'라고 공언한 바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동생인 김여정 제1부부장은 지난 4일 담화를 대북 전단 살

포를 비난하며 연락사무소 폐쇄, 개성공업지구 철거,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등을 각오하라고 발표한 바 있다.

김동업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의 다음 조치는 김여정 제1부부장이 언급한 3가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 남북군사합의 파기, 그리고 개성공업지구의 완전철거 순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북한이 대남 사업을 적대적 기조로 바꾼 것을 발표한 것도 향후 북한의 기조를 가능케할만하다.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여정 제1부부장은 지난 8일 북한 대남사업부서의 사업총화회의를 열고 대남사업을 철저히 대적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문은 "단계별 대적사업계획들을 심의하고 우선 먼저 북남 사이의 모든 통신연락선들을 완전 차단해버리는 데 대한 지시를 내렸다"고 보도했다.

단계별 '대적사업' 계획이라는 부분은 추가 조치에 대한 암시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군사합의 파기가 즉각 군사 도발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모습.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대남사업을 대적사업으로 전환한다는 결정은 최악의 경우 군사적 대결 상황까지 고려한 결정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 북미협상 의식없고 남북관계 추진하려면 정부...향후 사업 '먹구름'

북한이 향후 어떤 조치까지 행동에 옮길지 예상하기 어려운 가운데, 정부가 할 수 있는게 많지 않다는 분석이다. 아직 북한이 공언한 개성공단 철거, 군사합의 파기 등 최악의 상황까지 도달하지 않았지만 올해 초부터 강하게 드러나고 있는 남북협력 사업에도 브레이크가 걸렸다는 전망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북미대화만 바라보지 않고 남북협력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독자적 남북협력에 힘을 쏟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와 관련해 동해 북부선 추진,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5·24 대북 조치의 실효성 상실 입장 표명, 통일부 장관의 접경지역 방문 등으로 남북협력 사업에 시동을 걸었다.

그러나 협력 사업은 북한의 호응이 없는 한 추진이 불가능하다. 이날 노동신문은 "남조선 당국과 더는 마주 앉을 일도, 논의할 문제도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보도했다. 한동안 남측을 향해 적대적인 입장을 보일 것임을 시사한 셈이다.

김윤호 기자

여야, 상임위원장 배분 기준 입장 고수...원구성 '깜깜'

민주 "시간 끈다고 결과는 바뀌지 않는다" 18개 독식 압박
통합 "12일 본회의도 합의 못해...민주당 선택에 달린 것"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1대국회 원구성 법정시한(6월8일)을 넘긴 여야는 9일에도 상임위원장 배분을 두고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협상이 한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원구성 협상 전례와는 다르게 모든 상임위원장을 여당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고,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주요 쟁점 상임위원 법제사법위원을 맡아 민주당을 견제해야 한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통합당을 향해 "시간을 끈다고 결과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여야 합의가 불발되더라도

'18개 상임위원장 독식'이라는 카드를 통해 통합당을 압박하려 의도로 풀이된다.

주 원내대표는 여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식할 땐 오는 12일 본회의 개의회도 협조하지 않겠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 종료 후 기자들을 만나 "(의장은) 금요일에 상임위 배치를 내라고 하는데 어느 상임위를 가져올지 안 정해지면 낼 수 없다"며 "그게 해결 안 된 상태에서는 12일 오후 2시 본회의 여는 것에 합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과의 합의 가능성에 대해 "그건 민주당 결단에 달린 것"이라며 "민주당이 법사위 포함해 다 가져가겠다고 하고 처음부터 쟁점이 안 풀린 상태에서 지금까지는 건데 민주당 선택에 달렸다"고 지적했다.

홍준표, 통합당 모임 첫 참석

"우리당...아차 난 무소속이지"

4·15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을 탈당, 무소속으로 당선된 홍준표, 권성동 의원이 모처럼 통합당 의원 모임에 얼굴을 비쳤다. 21대 국회 개원 이후 무소속 의원이 통합당 모임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홍 의원과 권 의원은 이날 오전 장제원 통합당 의원이 주도하는 '미래혁신포럼'에 고문 자격으로 참석했다.

홍 의원은 인사말에서 "미래혁신포럼 가입을 허락해준 장제원 대표께 감사드린다"며 "25년간 정치를 하면서 선거를 두 달 앞두고 지역구를 세번이나 쫓겨 다닌 것

은 이번에 처음 경험했다. 선거를 29일 앞두고 대구로 가서 암담했는데 결국 시민들의 도움으로 국회에 다시 복귀할 수 있어 정말 고맙게 생각한다"고 했다.

홍 의원은 "제가 당 대표 시절 원희룡 지사는 차세대 리더였지만 지금은 현세대 리더가 됐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담대한 변화를 이끌어 가는데 앞장서 주시고 야당을 제대로 된 야당으로 이끌어 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홍 의원은 "우리당"이라고 했다가 "무소속이지"라고 고쳐 말하며 웃기도 했다.

김윤호 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 062) 971-7400
광고 직통 224-5800
팩 스 222-5547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